

韓 또 ‘공급망 리스크’ ‘대출규제’ 수도권 집값 상승 부추겼다

제조업 불확실성 확대

中 희토류 수출 제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제조업 전반이 ‘공급망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단기적 충격을 막기 위한 기업들의 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산업계는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6월 7742톤(t)이던 희토류 수출량은 7월 5994t, 8월 5791t으로 2개월 연속 줄었다. 6월 대비 8월 수출량은 약 25% 감소한 수치다.

中 희토류 수출 두달만에 25% 줄어 레이더·항공전자 장비 고희토류 필수

국내 방위·자동차 업계에 타격 예상 산업계,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절실

특히 중국은 지난 4월부터 희토류 7종(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는데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의 승인률은 25%에 불과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항공, 방산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지만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0~70%, 정제·가공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희토류의 경우 단순한 매장량보다 정제와 중간재 생산 능력이 더 중요한데 이 전 과정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오는 2040년까지 네오디뮴 자석 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방위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항공전자 장비에는

고희토류가 필수다. 유도무기의 조종면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AESA 레이더의 마이크로와 부품 등에도 네오디뮴·사마륨·디스프로슘·테르븀이 들어간다.

해외 대규모 수출 계약을 잇따라 파낸 상황에서 원료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납기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뢰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산업도 긴장하고 있다.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 주요 전장부품까지 희토류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전기차 한 대에는 많게는 100개의 소형 전동 모듈이 들어가고 상당수가 네오디뮴 계열 자석으로 작동한다.

현대차·기아는 유럽과 북미 생산라인을 확대 중에 있지만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핵심 소재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신차 출시 일정과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희토류 비축 확대와 해외 광산업체와의 장기 계약 추진 등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지만 중국이 공급망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산업계는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전략물자로서 희토류 비축을 확대해 최소 6개월치 이상 재고로 단기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베트남 등 대체 공급원 확보를 위한 외교 협상과 투자 지원도 절실하다. 특히 베트남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한국과 협력 의지가 강해 현실적 파트너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가격 급등과 납기 지연은 물론 산업 전략적 자율성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단순한 원자재 확보를 넘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 0.04% ↑ 5개 광역시 -0.14%로 하락폭 확대 전세 오르고 월세 거래 사상최고치

6·27대출 규제가 무색하게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에 우세해졌다.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고, 전세 시장도 불안해졌다. 월세 거래 비중은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4% 상승했다.

서울(0.46%)과 경기(0.03%) 등 수도권은 0.18% 올라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5개 광역시(-0.14%)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7월 0.8%에서 8월 0.36%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8월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8월 마지막주(8월 25일~9월 1일) 강남구가 전주(0.19%) 대비 0.42% 상승했고, 양천구도 전주(0.11%) 대비 0.16% 올랐다.

KB부동산전망지수도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상승 전망으로 돌아서면서 향후 상승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16일 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우세해졌다.

대출 규제로 거래는 크게 위축됐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4000호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의 거래량이 각각 16%, 21%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22%)을 포함해 수도권이 24%나 줄었다.

KB부동산은 “6월 거래량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지만 수도권에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며 “정부가 지난 7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내 관망 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27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전세 대출

도 조이면서 전월세 시장도 불안해졌다.

8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수도권에 0.09% 오르면서 2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비수도권은 6월 이후 두달 연속 상승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대신 전세를 유지하며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었고,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로 갭투자가 줄면서 전세물량 자체도 줄었다.

7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는 월세 비중이 63.9%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부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축소되면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61.9%, 비수도권 67.9%로 집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25일 이후 통폐합 논의 급물살 탈 듯

》1면 ‘금융·발전 공기업...’서 계속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전공기업만해도 앞으로 역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공개 언급한 만큼,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발전 공기업을 2개 축으로 묶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다만, 발전 공기업 통합시 지역 고용 축소와 투자 차질이 우려되고, 노조 반발도 넘어야 할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공공기관은 331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 늘었다. 공

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7곳, 기타공공기관 243곳이다. 순정부담액 등 재정 지표가 악화되면서 덩치 줄이기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재정 건전성 확보 뿐 아니라 정부 신뢰 회복의 문제”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은 녹록치 않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국회 협의가 필수적이고, 부처 간 기능 이관 과정에서 이해충돌도 예상된다. 본사 이전·일자리 축소 등 지역 현안과 노조 반발도 걸림돌이다. 특히 통폐합

대상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TF가 얼마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관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 정책금융·에너지 전환 등 핵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목표와 기관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오는 25일 국회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TF 가동 이후 이르면 연말까지 1차 개혁 대상 기관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치열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의회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